

노 동 동 향

경제일반

홍서연*

◆ 2001년 연간 실질경제성장률 3.0%(4/4분기 3.7%)

- 2001년 연간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 및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 확대에 따라 3.0%의 경제성장을 기록(표 1 참조)
 -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년대비 5.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도 꾸준한 성장을 하였으나, 농림어업은 전년대비 1.4%, 제조업은 전년대비 1.7% 성장에 그침.
 - 최종 소비지출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7% 성장한 반면, 총고정자본 형성은 건설투자(5.8%)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큰폭으로 감소(-9.8%)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0r					2001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국 내 총 생 산(GDP)		9.3	13.1	10.2	10.0	5.0	3.0	3.7	2.9	1.9	3.7
경 제 활 동 별	제 조 업	15.9	22.9	17.1	18.5	6.9	1.7	4.5	2.2	-1.7	2.1
	건 설 업	-3.1	-7.0	-3.7	-1.7	-1.1	5.6	2.4	1.5	7.6	9.5
	서 비 스 업	9.5	12.4	10.7	9.3	6.1	4.1	3.9	4.0	3.8	4.7
수 요	최 종 소 비 지 출	6.7	10.2	8.3	5.5	3.4	3.7	1.2	3.5	4.3	5.6
	총 고 정 자 본 형 성	11.4	22.8	13.2	10.9	2.0	-1.7	-4.0	-4.8	-3.1	4.9

주:r은 보정치임.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1년 국민계정(잠정)』, 2002. 3.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 실물경제지표 호조

- 2002년 1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출하 등의 실물경제지표는 설날의 2월 위치와 자동차부문의 파업 이후 공급 확대를 위한 조업 증가의 영향으로 큰 폭의 호조를 보임(표 2 참조).
 - 산업생산은 자동차, 음향통신기기, 기계장비, 컴퓨터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0.2%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부가가치 기준)은 2002년 1월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됨.
 - 제품출하는 내수출하(20.9%)와 수출출하(5.5%)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 재고는 음식료품, 의복 및 모피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음향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4로 전년동월대비 2.5포인트 상승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2년 1월에 99.2(1995=100 기준)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표 3 참조)
 -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4포인트 상승하여 2001년 12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
 - 선행종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용 중간재 생산지수, 중간재 출하지수 등의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

<표 2> 산업활동 동향

(단위: %, 1995=100)

	2000		2001						2002
	11월	12월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생 산									
제 조 업	6.4	4.5	-0.1	-4.9	4.7	-1.6	4.8	2.9	10.0
서 비 스 업	8.6	7.6	8.7	6.7	8.5	7.1	8.3	8.5	9.7
출 하	3.8	3.9	-1.9	-5.6	4.6	-0.8	7.1	2.7	13.6
재 고	17.9	16.2	16.3	14.7	11.5	4.9	1.9	-1.7	-5.4
평균가동률	75.2	73.9	73.9	72.6	73.3	72.4	73.0	71.8	76.4

주: 평균가동률을 제외한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1월 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02년 1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2. 2.

<표 3>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전월대비 포인트, 1995=100)

	2000		2001							2002	
	11월	12월	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선행종합지수	-1.4	-0.8	-0.6	0.3	0.1	1.5	0.6	1.1	-0.2	1.9	
동행종합지수	-0.7	-0.2	-0.6	-0.2	0.1	0.7	0.6	0.5	-0.4	1.4	
후행종합지수	-0.2	-0.2	-0.3	0.4	0.3	0.4	-0.2	0.0	-0.1	0.8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1.1	100.6	99.7	98.3	98.0	98.4	98.7	98.9	98.2	99.2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2년 1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2. 2.

◆ 물가상승폭은 둔화추세 유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1년 5월을 정점으로 둔화추세로 반전하였고 9월부터는 3% 대로 낮아지고 2002년 2월에는 2002년 1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2.6%를 기록(표 3 참조)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의 가격상승과 개인서비스, 집세 등의 상승으로 전월대비로는 0.5%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
- 2002년 2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6%로는 상승(표 4 참조)
 - 전월대비 농림수산물 및 공산품가격의 상승과 서비스물가의 상승세에 기인

<표 4> 물가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월대비 %)

	2000	2001									2002	
	12월	1월	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3.4	3.6	4.8	4.7	3.3	3.4	3.4	3.2	2.6	2.6	
생활물가 상승률	4.2	4.9	4.9	6.3	6.0	3.4	3.6	3.7	3.0	2.4	2.4	
생산자물가 상승률	1.7	2.3	2.4	2.7	2.0	1.2	0.6	0.1	-0.7	-0.6	-0.2	

자료 : 한국은행, 『2002년 2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2. 3.

통계청, 『2002년 2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2. 2.

◆ 수출입 감소세 확대

- 수출은 설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표 5 참조)
 - 2002년 2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11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
- 수입도 설연휴의 영향과 전년동월대비 원유도입 단가의 하락으로 2002년 1월에 비해 수입감소율 확대
 - 2002년 2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0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6% 감소
- 한편 경상수지는 2002년 1월 3.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보다는 4.3억달러 감소

<표 5> 대외거래 동향

(단위: 백만달러, %)

	2001							2002	
	1월	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경 상 수 지	755.8	414.1	-143.4	735.8	300.4	738.1	15.3	325.2	-
수 출 액 ¹⁾	12,645 (4.0)	13,354 (5.3)	11,766 (-20.4)	12,447 (-17.7)	12,086 (-20.7)	12,349 (-17.6)	11,914 (-20.4)	11,436 (-9.6)	11,140 (-16.6)
수 입 액 ¹⁾	12,431 (-1.3)	12,732 (5.9)	11,338 (-15.6)	11,710 (-11.9)	11,507 (-18.4)	11,533 (-18.6)	11,302 (-14.2)	11,323 (-8.9)	10,491 (-17.6)

주: 1) 통관기준.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산업자원부, 『2002년 2월 수출입 실적(잠정) 평가』, 200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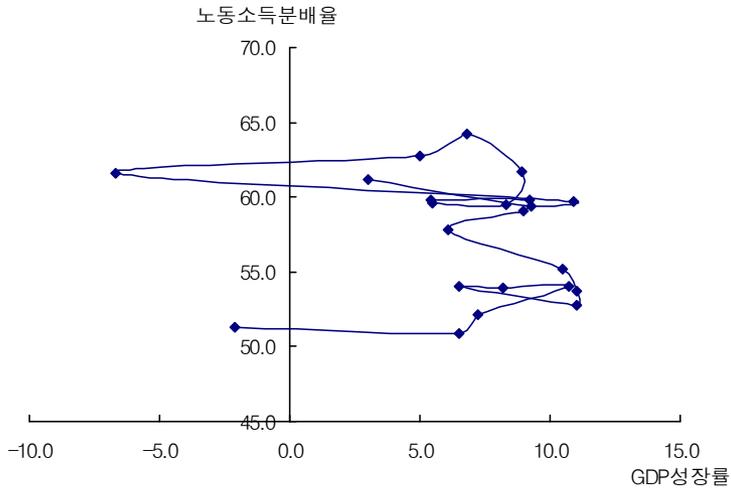
한국은행, 『2002년 1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2002. 3.

◆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부터 하락세로 반전후 2001년 상승

-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to NI)이란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노동소득분배율과 연간 GDP성장률(1980~2001)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1980년 GDP성장률은 -2.1%일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51.3%였고, 그 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까지 상승하다가 1997년에 반전하여 2000년까지 하락

- 2001년 GDP성장률은 3.0%, 노동소득분배율은 61.2%로 나타남.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과 GDP성장률과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노동동향

고용

홍서연*

◆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로 실업이 감소

- 2002년 2월 중 실업자수는 802천명(실업률 3.7%)을 기록하여 2002년 1월의 819천명보다 감소(표 1 참조)
 -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7%로 2001년 2월의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과는 상이한 추세를 보임.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5%(903천명) 증가한 21,099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도 74천명 증가하여 예년의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21,901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1.9% 감소한 14,806천명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0	2001			2002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1,750(0.4)	21,267(0.0)	21,265(0.0)	22,109(1.7)	21,845(2.7)	21,901(3.0)
참가율	59.9	58.5	58.5	60.3	59.6	59.7
취업자	20,857(1.2)	20,286(0.8)	20,196(0.2)	21,347(2.3)	21,025(3.6)	21,099(4.5)
실업자	893	982	1,069	762	819	802
실업률	4.1	4.6	5.0	3.4	3.7	3.7
비경제활동인구	14,576(2.0)	15,066(2.5)	15,092(2.6)	14,533(-0.3)	14,832(-1.6)	14,806(-1.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2년 2월 고용동향』. 2002. 3.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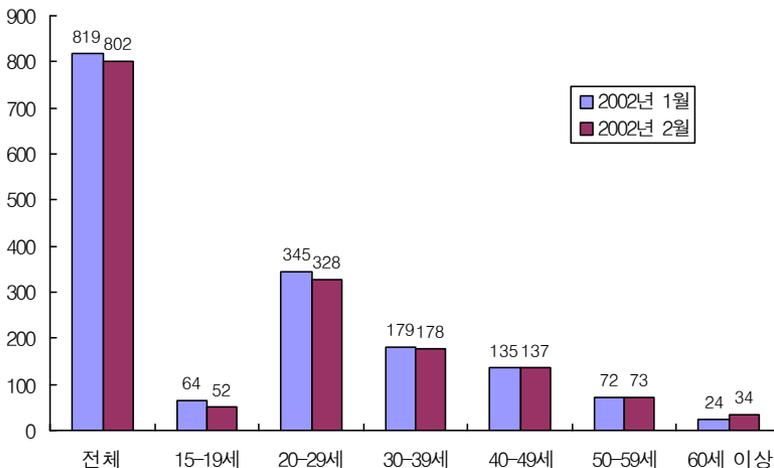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17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74천명 증가
 - 2001년 2월에는 실업자가 전월대비 87천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90천명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59.7%로 1월의 59.6%에 비해 0.1%포인트 증가

◆ 실업자 : 전월대비 실업자 감소는 20대에 집중

- 2002년 2월 실업자의 전월대비 감소는 20대에서 17천명, 10대에서 8천명(그림 1 참조).
 - 그러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자는 10천명 증가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2002년 2월 고용동향』, 2002. 3.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고, 전월대비 26천명(-0.2%) 감소(표 2 참조)
 - 2월 중 전월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이 추세였으나(작년의 경우 26천명) 금년에는 상반된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자로서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구직단념자는 92천명으로서 전월의 89천

명에 비해 소폭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62%로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표 2> 월별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천명, %)

	2001									2002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비경제활동인구	13,874	13,973	13,980	14,256	14,076	14,022	14,092	14,533	14,832	14,806	
구직단념자	111	118	130	126	114	93	93	83	89	92	
(비 중)	(0.80)	(0.81)	(0.93)	(0.88)	(0.81)	(0.66)	(0.66)	(0.57)	(0.60)	(0.62)	

자료: 통계청, 『2002년 2월 고용동향』, 2002. 3.

◆ 전월대비 취업자 증가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치중

- 전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1월에 비해 74천명(0.4%) 증가(표 3 참조)
 -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
 -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의 취업 증가가 두드러짐.
 - 그러나 수출부분에 해당하는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17천명 감소

<표 3>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2002. 1	2002. 2	전월대비 증감인원
전 산업	21,025	21,099	74
농림어업	1,651	1,668	17
광업	21	20	-1
제조업	4,165	4,148	-17
건설업	1,525	1,550	2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34	5,938	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613	5,647	34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16	2,128	12

자료: 통계청, 『2002년 2월 고용동향』, 2001. 3.

- 노동력 이동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서비스부문에서 신규 취업이 증가(표 4 참조)

- 2월중 신규취업자는 667천명으로 이 중 약 23.9%인 162천명은 실업에서 취업한 반면, 약 76.1%인 515천명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
- 신규취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1.2%, 211천명),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25.0%, 169천명)에 치중
- 반면 전기·운수·창고·금융은 6.4%(43천명)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 차지

<표 4> 산업별 노동이동(1월→2월)

(단위: 천명, %)

	전 체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 창고·금융
전 체	677(100.0)	74(10.9)	96(14.2)	84(12.4)	211(31.2)	169(25.0)	43(6.4)
실 업 자→취업자	162(100.0)	1(0.6)	27(16.7)	32(19.8)	49(30.2)	39(24.1)	13(8.0)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	515(100.0)	73(14.2)	69(13.4)	52(10.1)	162(31.5)	130(25.2)	30(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년 1~2월 원자료.

노동동향

임금 및 근로시간

이시균*

◆ 2001년 임금상승률 전년보다 2.9%포인트 하락

○ 2001년 연평균 5인 이상 전산업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7.0%로 전년의 8.7%에 비해 다소 하락(표 1 참조)

- 2001년 연평균 5인 이상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은 5.1%로 전년에 비해 2.9%포인트 하락한 반면,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1.7%포인트 하락하여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둔화세를 보임.
- 한편 10인 이상 전산업의 시간당 임금 역시 7.5% 상승하였으나 전년의 8.8%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시간당 임금상승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경기둔화로 인해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1>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전산업	임금총액 (천원)	1,222 (11.2)	1,368 (11.9)	1,463 (7.0)	1,427 (-2.5)	1,564 -	1,599 (12.1)	1,668 (8.0)	1,727 (8.0)	1,752 (5.1)	1,825 (5.6)
	시간당 임금(원)	5,555 (10.3)	6,279 (13.0)	6,816 (8.6)	6,661 (-2.3)	7,084 -	7,253 (8.9)	7,702 (8.7)	7,891 (8.8)	8,243 (7.0)	8,482 (7.5)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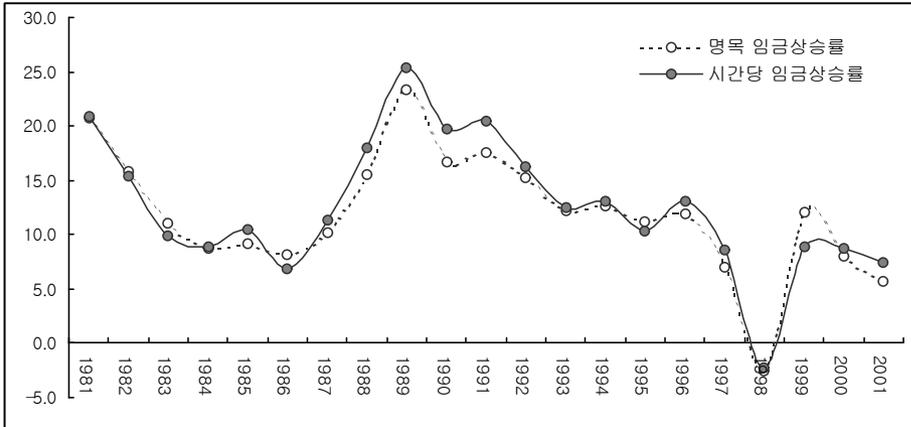
3) 1998년 이전은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 1989년 이후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임(그림 1 참조).
 - 1996년 이전까지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8%대 이하로 크게 둔화됨.

[그림 1]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전기가스 및 수도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에서 시간당 임금상승률 상승

- 2001년 산업별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을 보면, 지속적인 경기하락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전기·가스 및 수도업과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전기·가스 및 수도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에서 2001년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각각 12.8%, 7.9%로 전년에 비해 5.6%포인트, 0.9%포인트 상승
 -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9.2%로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나 1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12.2%로 전년에 비해 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각각 0.0%, 2.9%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

<표 2> 산업별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및 격차

(단위: 원, %)

	2000		2001	
	5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전 산업	7,702 (8.7)	7,891 (8.8)	8,243 (7.0)	8,482 (7.5)
제조업	6,823 (10.0)	6,909 (9.9)	7,423 (8.8)	7,546 (9.2)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997 (7.2)	11,145 (7.4)	12,410 (12.8)	12,573 (12.8)
건설업	8,613 (9.0)	9,313 (10.2)	8,612 (0.0)	9,356 (0.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359 (9.9)	7,726 (10.2)	8,038 (9.2)	8,670 (12.2)
운수·창고 및 통신업	7,621 (13.2)	7,680 (13.5)	7,838 (2.9)	7,874 (2.5)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9,230 (6.4)	9,464 (6.4)	9,900 (7.3)	10,211 (7.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797 (5.6)	9,300 (4.8)	9,129 (3.8)	9,721 (4.5)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2001년 산업별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전년에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낮았던 전기·가스 및 수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전년에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건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

◆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격차 확대

- 2001년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상승률을 보면, 100~299인 사업체 규모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300~499인 사업체 규모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표 3 참조)
 - 100~299인 사업체 규모와 5~9인 사업체 규모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전년대비 5.5%, 6.2% 상승한 반면, 300~499인 사업체 규모의 시간당 임금은 12.1% 상승
-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격차가 점차 확대
 - 5~9인 규모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한 임금격차 지수를 보면 300~499인 이상 규모의 시간당 임금은 1999년에 134에서 2001년에 146으로, 500인 이상 규모

의 경우 155에서 160으로 높아져 경제위기 이후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3>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원, %, 5~9인 규모 임금=100)

	1999		2000		2001	
		격차		격차		격차
5~ 9인	5,934 (-)	100.0	6,393 (7.7)	100.0	6,788 (6.2)	100.0
10~ 29인	6,544 (5.7)	110.3	7,156 (9.4)	111.9	7,754 (8.3)	114.2
30~ 99인	6,473 (5.4)	109.1	7,118 (10.0)	111.3	7,770 (9.2)	114.5
100~299인	6,696 (4.4)	112.8	7,414 (10.7)	116.0	7,820 (5.5)	115.2
300~499인	7,971 (7.1)	134.3	8,857 (11.1)	138.5	9,931 (12.1)	146.3
500인 이상	9,219 (7.4)	155.4	10,121 (9.8)	158.3	10,864 (7.3)	160.1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성별 임금격차 축소

- 2001년 성별 시간당 임금동향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2.1%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축소(표 4 참조)
 - 2001년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8.8%로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반면, 남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6.7%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나 하락
 -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때 남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이 1999년에 153.4, 2000년에 152.8, 2001년에 149.9로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축소
- 1990년 이후 남성근로자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음(그림 2 참조).
 - 남성근로자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 수준은 1990년 53.6, 1995년 61.3, 그리고 2001년에는 67.3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
 - 지난 10년간 성별 임금격차가 축소되긴 하였으나 여성근로자 임금수준은 남성근로자 임금수준의 2/3 수준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 성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원, %, 여자 임금=100)

	1999		2000		2001	
		격차		격차		격차
남자	7,879 (-)	153.4	8,588 (9.0)	152.8	9,160 (6.7)	149.9
여자	5,138 (-)	100.0	5,620 (9.4)	100.0	6,112 (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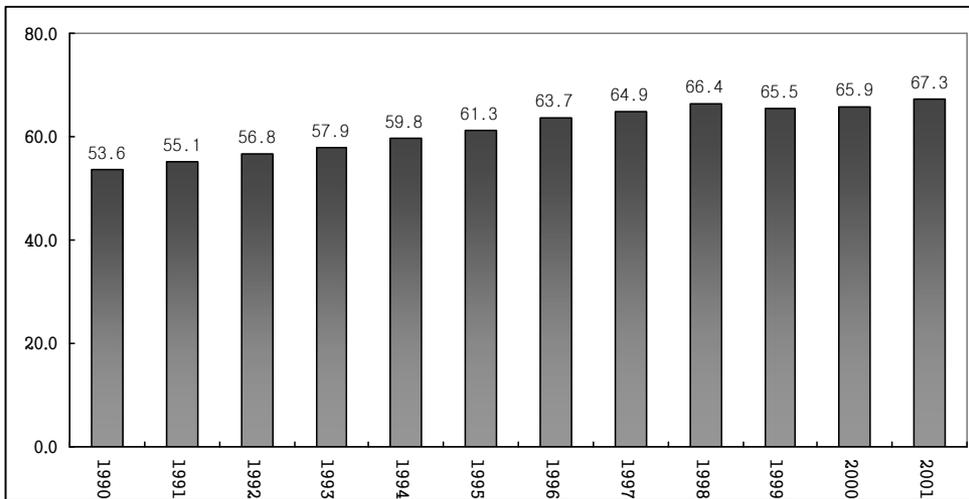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3)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2] 남성근로자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 추이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노동동향

노사관계

이시균·진숙경*

I.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참가자수 증가

- 2002년 2월 28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참가자수·근로손실일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크게 증가
 - 특히 분규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인수는 각각 16,615명과 80.4천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68명과 69.5천일 보다 크게 증가
 - 발생건수와 분규 참가자수,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2001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분규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게다가 2월 25일 촉발된 한국발전산업노조의 파업(5,609명 참가)으로 분규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증가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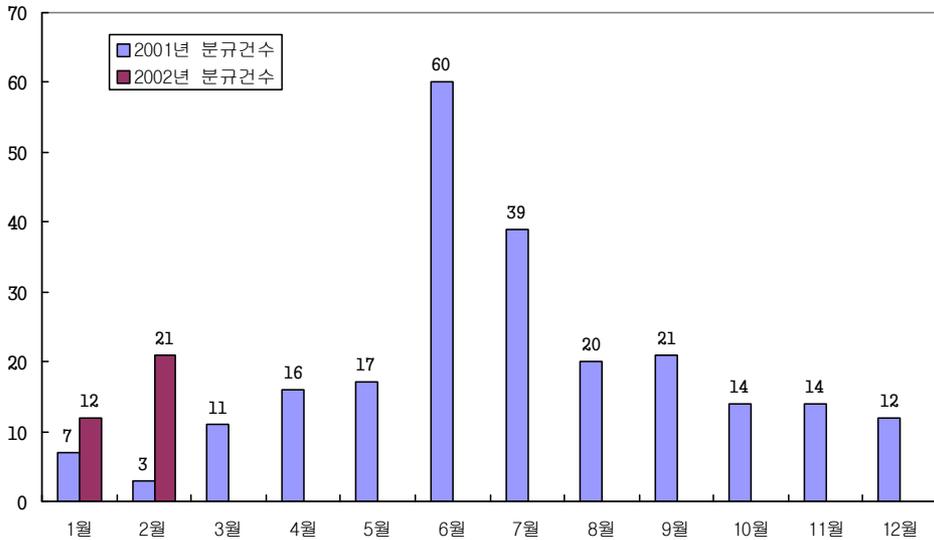
(단위: 건, 명, 천일)

	2000년 2월 28일	2001년 2월 28일	2002년 2월 28일
노사분규 발생건수	11	10<16>	21<11>
분 규 참 가 자 수	2,138<590>	368<4,015>	16,615<732>
근 로 손 실 일 수	32.8	69.5	80.4

주: < >안은 전년 이월분임.
자료: 노동부.

* 이시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lsk@kli.re.kr), 진숙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indorl@kli.re.kr).

[그림 1] 노사분규 발생건수 월별 추이(2001, 2002년)



II.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실업자 직업훈련 훈련과정 선정 개선방안 마련

○ 노동부는 실업자 직업훈련과 취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훈련과정 선정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

- 노동부는 훈련과정 선정시 전문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수요가 적은 훈련과정은 배제하는 등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발표
- 구체적으로 구인·구직수요에 따른 훈련과정 개설, 기업 및 전문가 위주의 훈련 심사위원회 운영, 취업률 등 성과위주로의 훈련과정 선정기준 개편, 인력수요가 많은 중·고급과정 위주의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
- 전국 168개 고용안정센터의 구인·구직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인력수요의 수시조사를 통해 산업현장 필요직종 위주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고용정보망의 구인·구직수요 분석을 통해 인력수요 중심의 훈련수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 또한 기업의 필요인력에 부응하는 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훈련과정심사위’를 실무형 현장전문가 위주로 대폭 개편
 - 그밖에 취업률 위주로 훈련과정 선정기준을 전환하는 한편, 중·고급과정을 확대해 인력수요에 따라 수준별로 훈련규모를 조정하고 해당 과정의 수준을 표시하는 ‘훈련과정 수준 표시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
- 훈련과정 선정에 관한 개선에 따라 ‘구인난과 구직난’의 이중고 해소에 대한 기여와 사업자의 취업 지름길로서 직업훈련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Ⅲ.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공무원노조 범외노조로 출발..... 미래 노동운동의 핵심 변수로 등장

- 공무원노조가 41년만에 부활했으나 정부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그 첫 발자국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은 3월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문화회관 앞 주차장에서 출범식을 개최
 - 공노련은 창립일 현재 63개 직장협의회, 1만 7,000여명의 공무원들이 가입해 있으며 4월 중순까지 126개, 3만여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와는 별개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중심이 되어 3월 24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전국 6만 5,715명이 참여
 - 정부가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 창립대회조차 불허하고 지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이 격화될 조짐
- 공무원노조 실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 범위를 두고 논의를 벌이던 노사정위 움직임에 탄력이 붙게 됨.
- 그동안 행자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정부 내부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으나 2월 27일 정부 단일안이 제출되면서 연내 입법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가시화

- 노사정위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당사자 및 전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 노사정위 차원의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
- 노사정위원회는 3월 24일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하여 노조측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과도한 활동을 자제하고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게는 노조 결성을 위한 예비적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여 이로 인한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권고
 - 노사정위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출범이 이뤄지고 있어 법외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가 예상되나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에는 노사정 모두가 일정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정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권고인 것
 - 그러나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 방침하에서 공무원노조 결성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서 정부가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방침을 가질 것으로 보여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노조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가 확대될 경우 향후 노정 갈등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됨.
- 공무원노조 실체 인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나 노조 명칭의 사용 여부로부터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교섭 범위, 노조 전임자 인정 여부 등 노조활동 전반에 걸쳐 노사정간의 이견 대립이 첨예하여 법개정이나 제정 이후에도 재개정을 촉구하는 노정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표 2 참조)
- 3월 중 2개의 조직으로 각각 설립된 공무원노조들은 향후 합법화 및 조직 확대, 조직 통합 등 주요 과제를 안고 있음.
 - 노조에 준하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와 노조로서 합법적 지위를 가지려는 노정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
 - 직장발전협의회 전국단위 결성 움직임에서 갈라지게 된 2개의 공무원노조는 노조설립 이전부터 조직 통합을 위한 만남을 가져왔으나 조직형태나 운영원칙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 향후 2개 노조로 활동해 나가면서 통합 논의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함.
 - 이들 조직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연관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구조가 총연맹단위의 경쟁을 부추기고 조직 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음.
 - 공무원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협의회를 기본 조직으로 건설된 공무원노

조는 일차적으로 약 9만명 가량이 조직대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향후 4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조직화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전국민적 명분을 얻기 위한 쟁점을 어떻게 형성해 낼 것인지 관심

<표 2> 각계의 공무원노조 입법안 비교

	한국노총	공노련*	전공노	경영계	정부안
명칭	노조	노조	노조		단체 또는 조합
허용직급	5급 이하	5급 이하	5급 이하	6급 이하	6급 이하
허용직종	비서직, 국정원, 군인, 경찰 제외	비서직, 국정원, 군인, 경찰 제외	군인 제외	군인, 경찰, 공안직, 소방직, 교정직, 기밀직 제외	군인, 경찰, 소방, 공안직원, 인사, 예산, 비서, 운전, 방호원 등 제외
노동기본권보장범위	노동3권	협약체결권을 포함한 완전한 노동2권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협약체결권 불인정)
교섭범위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공무원관련 정책 포함)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공무원관련 정책 포함)	근로조건 및 공무원제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보수 기타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예산·법령 관련 제외된 근무조건
교섭당사자	전국단: 국무총리 지방단위: 광역단체장	전국단위: 국무총리 지방단위: 광역단체장	국무총리	기관의 장	전국단위: 중앙인사위원장 광역시도단위: 광역단체장
조직단위	국가공무원: 전국단위 1개 지방공무원: 광역시도단위 17개	국가공무원: 입법·사법·행정부별 각 1개 지방공무원: 광역시도 단위	단일노조	광역단위	국가공무원: 전국단위 지방공무원: 광역시도단위
복수노조	민간노조 동일	교섭창구 단일화 전제로 인정	단일노조 원칙	전국단위에서만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전제로 인정
노조 전임자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불인정하되 노조활동 필요시간 인정 (Time-off제)
분쟁조정기구	중앙노동위	중앙노동위			불필요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적용	노조법 적용			
습제도	(단체에서 논의)		유니온 슝 인정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노조 합법화시 즉시 폐지		직장협의회는 폐지		직장협의회 존치
입법형식	노조법 개정	노조법 개정	노조법 개정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제정
입법시기	입법은 2002년 상반기 시행은 2004년 1월 1일	입법은 2002년 상반기 시행은 2003년 상반기	입법은 2002년 내 시행은 2003년		입법은 2002년 내 시행은 3~5년 유예 기간

주: * 공노련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줄임말.

** 전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줄임말.

◆ 주 5일근무제 법개정 연내 처리 불투명

- 주 5일근무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음.
 - 2월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이후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현 집행부가 주 5일제 연내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차원의 논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기대됨.
 -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 고위지도자 차원에서 벌어진 비공개 협상에서 진전된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공부문 3사 연대파업 이후 노정 대립이 심화되면서 협상분위기는 급격히 냉각
 - 국회가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로 법안 처리할 방침이고, 6월 지방선거를 비롯해 월드컵, 아시안게임, 12월 대통령선거 등 국가적 행사와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노동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 주 5일제 도입 원칙이 확인된 이래 2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내 도입 가능성도 적어지자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악화없는 주 5일제 실시”를 촉구하며 발전노조 투쟁과 결합해 연대파업을 고려하고 있으나 파업의 영향력은 미지수
- 주 5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주 5일제를 기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위사업장 차원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로 이어질 전망
 - 정부가 법개정과 관계없이 공무원에 대한 부분적인 주 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대공장이나 은행·사무직노조 등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체결시 주 5일제 도입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삼성그룹 또한 하반기부터 사무직에 우선적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하고 생산직으로 점차 넓혀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대기업이나 생산현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 5일제는 공무원·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되고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고 중소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짐.

◆ 조직 확대를 둘러싼 양노총 갈등 표면화

-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3개사 노조의 연대투쟁 이후 조직 확대를 둘러싼 양노총

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 전력회사 분할에 따라 노조가 3개로 나뉘면서 전력노조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발전노조는 민주노총으로, 수력원자력노조는 무소속의 길을 택함.
 - 가스·철도노조가 연대파업 이후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중간노조로 존재하던 한국수력원자력노조 또한 민주노총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 진영의 재편이 예상된다.
 - 특히 한국노총의 모태 역할을 담당했던 철도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할 경우 한국노총 조직에 전반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부문 3사 연대파업에 대해 한국노총은 협상을 통한 타결을 지도한데 반해, 민주노총은 4시간 동맹파업으로 대응하는 등 양노총은 전술상의 차이를 드러냄.
-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초기에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민주노총이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자 한국노총은 “남의 조직 빼가기식의 활동”이라며 매우 반발
- 이후 양조직간의 부분적인 연대 및 공식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개적인 상호 비난은 자제되어 왔으나 조직 내부적으로는 경쟁관계가 유지됨.
 - 민주노총이 5일 <교수노조 이어 가스공사도 민주노총 가입, 철도노조도 한국노총 탈퇴 논의…… 한전자회사 6개노조 상급단체 통일키로>라는 보도자료를 내자 곧바로 한국노총도 <노동계 단일대오로 집중할 시기에 조직분열 조장하는 '민주노총 보도자료 유감'>이라는 반박자료를 내 미묘한 경쟁관계를 표면화시킴.
- 공공부문 파업사태 이후 두드러진 한국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한 불만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인식의 표출일 뿐 아니라 공기업 노사관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대법원에 의해 노조 3중간선제가 위헌으로 판결나면서 전력이나 철도 등 노조는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됨. 이 과정에서 기존 간선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 세력’이 당선되면서 간선집행부와 연관을 맺어온 한국노총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함.
 - 노조의 협조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노사관계 관행에 익숙한 공기업 경영진들은 집행부 변화에 대응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노사·노정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함.
 - 노정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타결을 희망하는 한국노총의 방식으로는 구조조정에서 제기되는 조합원들의 높은 요구를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을 확인

- 노동부의 2000년 말 전국노조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61만 4,000여명으로 1995년 40만 6,000여명에서 약 20만명이 증가한 반면, 한국노총은 87만 2,000여명으로 1995년의 120만 8,000여명에서 약 33만명이 감소
 - 그러나 양대노총을 모두 합해도 150만여명 정도로 전체 노동자수에 비해 조직화 비율은 매우 낮은 편
 - 따라서 양노총이 조직간의 경쟁보다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주력해야 하며 조직노동자들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
 - 그러나 이들 조직간의 경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3월 결성되는 공무원 노조의 항배가 경쟁의 승자를 판가름하는데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노사정위, ‘근로시간·공무원노동기본권’ 지역공청회 개최

- 주 5일근무제 도입 원칙에 합의한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각 지역 사업장 노사대표들의 이해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근로시간 단축관련 지역간담회’를 전국 9개 지방도시에서 개최
 - 노사정위는 지역간담회를 통해 노사 모두 주 5일근무제 도입은 대세이며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함.
 - 노동계는 연월차 통합, 휴일·휴가 감소 등으로 임금감소가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임금보전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동자 보호대책 필요성 등을 제출
 -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지원책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주 5일제의 단계적 실시보다는 경제상황, 법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의 괴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늦추되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
 - 노사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지역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었으나 법개정과 관련한 중앙단위 논의에 진척이 없어 간담회의 성과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과제
-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노사정위는 3월 7일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도시 지역 순회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의 반대로 대다수 지역의 공청회는 무산
 - 노사정위는 행정자치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한국노총과 지역 공무원직장협

의회 및 경영·언론계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노사정위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 합의할 방침

- 그러나 전공련은 노사정위가 노조명칭 사용 불가, 체결권 및 행동권 제약 등 한정적 노동기본권만을 인정한 정부안을 공청회를 통해 설명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려는 ‘요식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광주 등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대규이외 다른 지역의 공청회는 취소됨.

◆ 철도·가스·발전 공공 3사노조 연대파업 파장 커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 3개사 노조가 2월 25일 연대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으며 발전산업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 연대파업 하루만인 3월 25일 한국노총 소속의 한국가스노조가 가장 먼저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어 철도노조 또한 파업을 철회하였으나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산업노조는 ‘민영화 철폐’라는 강도 높은 요구안을 내걸고 한 달이 넘는 파업을 전개
 -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한 발전노조 지도부가 2월 26일부터 서울대 등에 집결해 있던 조합원들을 산개하도록 하면서 사태는 장기화되어 옴. 더욱이 발전 5개사로 구성된 사용자측 협상대표단이 3월 5일 “민영화 문제 논의 불가”라는 원칙을 주장하며 교섭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의 중재를 요청, 3월 8일 단체협약 132개 항에 대한 중재재정이 내려지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어옴.
 - 중재재정안은 노조 전임자 13명, 조합원 신분변동시 60일전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험의, 조합원 고용승계, 근속년수·단체협약·노동조합 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중노위 중재재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발전노사의 단협 협상은 일단락된 것
- 장기화된 발전노조 파업은 금년도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발전노조에 대한 지원투쟁을 계기로 임단협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음.
 -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연대와 주 5일제 쟁취, 구속자 석방 등을 공동요구로 내걸고 2월 26일 현대차·기아차·금속산별노조 등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개 사업장, 13만여명의 조합원이 4시간 동맹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힘.
 -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노총 임원을 비롯한 산하 연맹 위원장들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3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23일까지 정부가 노조에 대한 전면탄압 태도를 변화하지 않을 경우 26일 긴급대의원대회를 소집, 제2의 연대총파업을 벌일 계획

- 한국노총 또한 발전노조 지도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의 초강경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연대투쟁에 돌입할 방침

○ 정부는 민영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태도와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고, 노조는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정정도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노정간의 타협점을 찾기 어렵.

- 정부는 노조간부 2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회사 경영진은 763명(전체 조합원 대비 13.6%)을 고소, 49명 노조간부를 해임하는 한편, 향후 징계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파업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해고 및 징계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예견되고 있어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

○ 한편 발전노조와는 달리 파업 돌입 하루만에 타결을 이루어낸 철도·가스노조는 이에 반발하는 조직 내부의 움직임과 타결 이후 밀어닥친 회사측의 징계 방침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

- 가스공사노조는 위원장 등 집행부가 물러남에 따라 29일과 30일 위원장 선거를 치르는 한편, 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이와 관련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

- 철도노조는 타결 이후 내려진 징계 조치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나 집행부 신임 여부를 묻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70.8%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직선으로 선출한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확인. 그러나 계속되는 고소·고발, 감사관실 출석요구, 징계 위협 등에 맞서 ‘제2의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음.